

USCIRF – RECOMMENDED FOR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21년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도 연례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02-523-3240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개요

2020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알려진 북한의 종교적 자유 실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주체사상은 종교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경쟁 이데올로기들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 북한 노동당 종교 안내 (Transcendental Guidance) 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10대 강령](#)은 [주체사상](#)에 근간을 둔 원칙으로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 10대 강령은 국제법과 북한 [헌법](#) 등의 북한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목상으로 인정할 뿐이다. 2018년에 발표된 당 내부의 법률 해설은 북한 헌법과 형법을 10대 강령과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해석하라는 당국의 지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설에는 반종교적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 조선 불교도 연맹, 장충 성당, 광범사 등의 국가 후원 종교 단체와 예배당을 통해 외부 세계에게 북한에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고 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개신교도, 불교도, 샤머니즘이나 한국 전통 민속 신앙 신봉자, 천도교도 등의 다양한 종교 단체와 신도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있다. [출신성분 제도](#)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시민을 분류하는데 종교인들은 “적대” 계층에 속하여 “차별, 처벌, 격리, 심지어 사형”을 받아 마땅한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KFI)라는 비정부 기구(NGO)가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종교적 활동, 중국 내 종교 활동, 성경책과 같은 종교

소품의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예배 출석, 종교적 신념의 공유 등 다양한 혐의로 종교 신봉자들을 박해했다. 종교 신도들은 임의 감시, 신문, 체포, 구금, 투옥, 가족 처벌, 고문, 성폭행, 강제 노동, 사형 등 다양한 공식적인 침해와 학대를 당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포로 수용소, 수감 시설, 정치범 수용소, 재판적 구치소를 운영하는 국가보위부(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노동 수용소, 수감 시설, 재판전 구치소, 장기 재교육 수용소, 관할 경찰서를 운영하는 인민보안부(Ministry of People's Security, MPS), “MSS 및 MPS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경보안사령부(Border Security Command) 등 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일에 직접 연루된 북한 정부 기관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KF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개신교도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고 그 다음으로 취약한 계층이 샤머니즘 신봉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발표된 USCIRF 보고서 결과와도 일치한다. NGO Open Doors는 2021년 1월에 북한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Open Doors는 북한 내 기독교인 수는 400,000명 정도이고 약 50,000~70,000명이 현재 투옥 수감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기독교인들은 심한 억압으로 인해 단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양한 감옥이나 감옥 비슷한 시설에 장기 투옥,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파열될 정도의 심한 구타, 교살, 기아, 성폭행, 강제 낙태, 사형 등의 가혹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주된 책임은 MSS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머니즘 신앙은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 신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샤머니즘을 “미신 범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 신도들은 구금, 체포, 신체적 폭력, 사형의 대상이었다. 샤머니즘 신도들에 대한 박해의 주된 책임은

MPS 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북한 내 다른 주요 종교적 전통을 믿는 신도들의 처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탄압에 관여하는 북한을 "특별관심국"(CPC)으로 재지정한다.
- 북한인권특사의 직책을 미 국무부 내 독립적인 정식 직책으로 채우고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해당 직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한다.
- 북한 내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기 위한 국제인권감시단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
- 종교의 자유와 관련 인권의 구체적인 진척이 있을 경우 그 대가로 특정 제재의 해제를 고려하는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안보와 인권을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시킨다.

미 의회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부와 협력하여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진전 및 종교적 자유 실태를 개선한다는 약속의 대가로 2016 년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른 특정 제재의 일부 또는 완전한 해제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주요 USCIRF 리소스 및 활동

- 정책 업데이트: [인권 옹호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기명 논평: [김정은 외의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배경

북한의 종교 통계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오래되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천도교(하늘 길의 종교)로 알려진 토착 혼합 종교 운동을 추종하였다. 북한은 한국 전쟁(1950-1953) 이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평양에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었지만, 잇따른 단속으로 인해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로 감소하였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경유해 남한으로 도주했을 당시 이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샤머니즘 및 점술과 같은 전통적인 민속 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

탈북자와 난민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의 종교적 자유 실태에 대한 주요 정보원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였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에 약 23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며 2019년 1,04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송환 시 탄압을 받을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각될 경우 이들을 송환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1951년 채택된 유엔의 난민협약(Convention on Refugees)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북한 탈북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 선교사 수백 명을 추방하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남한)의 국회는 전단지외 성경 같은 종교 소품과 문화 소품을 포함한 반북 자료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논쟁적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반북 자료를 북한으로 보낸 활동가들은 대부분이 탈북자와 기독교 선교사들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인권 단체들과 미국 정치인들](#)이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종교적 양심수

북한 사회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적 및 정치적 양심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NGO들과 구호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과 그 가족을 북한 정부의 박해와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신원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USCIRF는 장문석 집사(Deacon Jang Moon Seok)를 — 중국 이름은 [Zhang Wen Shi](#) — 종교적 양심수(RPOC)로 채택하고 그의 석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Zhang은 한국계 중국 시민이다. 2014년 11월 북한 요원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되기 전까지 Zhang은 중국 내 북한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유했다. 북한 당국은 Zhang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엔 활동

2020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UHRC)는 북한이 “장기간 저질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총체적 인권 침해 및 기타 인권 남용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종교나 신념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부정”, 종교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신분](#) 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종교를 비롯한 여타 이유로 개인과 집단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UHRC는 또한 북한 정부에게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UHRC 회원국인 한국은 이 결의안 통과를 [지지했지만](#) 결의안 초안의 공동 작성자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12월 16일, 유엔 총회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결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북한 주민에게 가하는 사형 선고와 집행,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만연하고 가혹한 제한, 종교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신분](#) 제도에 기반한 정부의 차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이 결의안의 [공동 작성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심 정책

2020년, 안보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8년과 2019년에 세 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두지 못했다. 넓게는 인권 문제,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문제가 양측 협상의 필수 의제로 포함되지도 않았다.

12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중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 북한 내 인권 남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요청에 [반대하자](#) 7개국은 이 문제를 12월 11일 비공개 회의에서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같은 12월에, 국무부는 IRFA에 따라 북한을 CPC로 [재지정했으며](#) 1974년 무역법 제 402조 및 제 409조에 의거하여 이미 북한에 적용 중인 제재 조치들을 다시 부과하였다.